**통일은 대박이다**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대박의 내용은 무엇이며, 통일로 어떻게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우선 경제적인 측면 위주로 조명해 보고, 실사구시 차원에서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통일이 되면 전무후무한 큰 이득이 돌아 온다. 남북이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윈윈 게임이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통일이 되면 대박이 자연히 따라 온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통일을 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통일로 가는 길을 정성껏 개척해 나가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리하여 드디어 통일을 만들어 내게 될 때, 미리 준비한 바람직한 정책들을 적시에 채택, 시행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모두 열심히 노력한다면 대단히 큰, 그래서 가히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이득, 편익,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이득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대가가 따른다. 그에 따르는 비용과 그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해득실을 따져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시경제적 구도에서 통일비용은 전반적으로 통일 후 10년 기간 남측 GDP의 7% 내외이다. 그런데 이득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같은 10년 기간에 남한 측만 별도로 따져볼 때, 매년 11% 내외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얻어 낼 수가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대박이다. 그런데 통일과 동시에, 그리고 그 10년 후의 시기에 이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대단히 크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한다.

**통일비용**

통일비용 내지 통일자금이라 함은

1)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2)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 체계를 각각 일원화 시키는 데 소요되는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3)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

이들의 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10년 기간 동안 남측 총소득의 약 7%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남북소득조정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통일자금의 크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만일 2025년에 외형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로부터 10년 후 북측의 1인당 소득수준이 남측의 절반까지 따라오도록 만드는데 매년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크기와 전체 액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

2026∼2035년 10년간 자본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남북  1인당 소득차이  ($) | 북측 인구  (천명) | 총 소요  자본 (억$) | 총 소요  자본의 1/2  (억$) |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 연도별 투자액 (억$) | 남측 GDP  (억$) | 매년 투입액/  남측 GDP 비율(%) |
| 2026 |  |  |  |  |  | 1,187 | 18,827 | 6.3 |
| 2027 |  |  |  |  |  | 1,223 | 19,391 | 6.3 |
| 2028 |  |  |  |  |  | 1,259 | 19,973 | 6.3 |
| 2029 |  |  |  |  |  | 1,297 | 20,572 | 6.3 |
| 2030 |  |  |  |  |  | 1,336 | 21,190 | 6.3 |
| 2031 |  |  |  |  |  | 1,369 | 21,719 | 6.3 |
| 2032 |  |  |  |  |  | 1,404 | 22,262 | 6.3 |
| 2033 |  |  |  |  |  | 1,439 | 22,819 | 6.3 |
| 2034 |  |  |  |  |  | 1,475 | 23,389 | 6.3 |
| 2035 | 40,596 | 27,399 | 24,470 | 12,235 | 10,196 | 1,512 | 23,974 | 6.3 |
| 합계 |  |  |  |  |  | 13,501 |  |  |

자료: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221면.

남북 소득조정을 위한 총 투자소요액은 1조3천5백억 달러로서 매년 남측 GDP의 6.3%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되는 여타 비용들을 합하면 대략 남측 GDP 7%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통일비용의 전모이다.

**통일이득**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은,

**①**통일 시점에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과,

**②**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 가히 대박으로 나타나는 이득, 그리고 **③**그 이후 그 연장 선상에서 지속되는 경제성장 내지 경제발전으로부터 오는 이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통일과 함께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는 피할 수 없이 계속 치를 수 밖에 없었던 부담, 비용은 더 이상 부담하거나 치를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은 분단비용의 양면성이다. 즉 통일이 이룩되는 시점까지 분단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비용이고 부담이지만, 통일되는 즉시 그 부분이 소멸됨으로 써 바로 그만큼 크기의 이득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비용이 되기도 하고 이득이 되기도 한다. 분단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던 부(否)의 숫자가 영(零)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바로 그만큼 이득이다.

그런데 1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통일 마무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 보다는 분단상태가 해소되기까지 무한정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 따라서 통일은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동안 이 부분만 가지고도 통일이 이득이라는 면이 강조 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의 피부에 가 닿는 설득력으로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못했다.

2) 그 위에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하여, 남측에서는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식량부족 상태, 쉽게 말하자면 굶주리는 상태로부터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수준 보다도 더 높은 경제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 없는 꿈 같은 탈바꿈을 하게 된다.

이 때 북측 주민들은 남측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들 자신들을 위한 생산활동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고, 남측이 북측을 착취하거나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님으로, 북측 주민들이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과정에서 남측에서는 개인적인 세금 부담으로 총소득의 1%, 그리고 3%의 국채발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되는 군비와 장기저리차관으로 충당하면 더 이상의 무리한 부담은 없게 된다.

3) 그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멈추어 서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성장 동력의 탄력을 받아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의 활성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014년 2월 3일 조선일보 여론 조사 발표를 보면 통일이득이 통일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48%에 이른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통일 후 일자리 경쟁이 더 심해 질것을 염려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비용 때문에 그리고 세금 폭탄 맞을까 보아 걱정할 필요도 없고, 10년의 남북소득 조정기간에 경제분야에 한정된 남북분리 경제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일자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라 북측 경제에 소요되는 모든 실물자본을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구도 속에서, 인력이 모자라게 된다. 일반적인 우려와는 정 반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보람 있는 일도 하면서 수입도 늘리고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특히 군과 교육계에서 두드러진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면 어떻게 남측에서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 간추려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측 자본재 조달을 위한 GDP 대비 약7% 공급 가운데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라 그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크기 수준으로 GDP 대비 대략 5.6%까지만 남측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줄잡아 보기로 한다. (통일대박의 핵심적 비밀은 실제로 바로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 부분 없이는 실제로 대박이 힘 든다.) 여기에 가까운 장래 남측 경제 본래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개략적으로 3% 정도라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현역병 인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라 오는 생산량 증가 2.4%를 합치면 전반적으로 GDP 대비 약 11%의 경제 성장이 따른다.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41면)

그런데 여기에는 동태적 경제 움직임에 따르는 승수 효과나 생산량의 획기적 증가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에 부수하는 이득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수반하는 국제경쟁력 상승과 수출증가 분은 추가하여 감안하지 않고도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륙으로의 통로가 열리는데 따르는 이점도 크다.

그리고 북측 지역의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 활용에 따르는 남북 간 보완성은 다양한 형태로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물론 경제란 언제나 모두 뜻대로만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님으로 때때로 발생하게 되는 하향곡선 발생시에는 그와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그 부족분을 메워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해 볼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총수요 측면에서 유효 수요로 작용하는 것이 매년 GDP 대비 5.6%만큼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경제 하방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주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된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 성장률11%라면 단순 계산으로 따져 보더라도, 만일 통일 당시 남측 1인당 소득 수준이 3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10년의 소득 조정을 마치게 되면, 남측 국민의 소득 수준은 7만 7천 달러가 된다. 북측 지역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은 3만 8천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통일 당시 남측 국민의 평균 소득수준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함께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통일국가 전체로 보면 1인당 소득수준이 6만 5천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상태로 된다. 이런 현상을 품위를 따지지 않기로 한다면, 대박이란 말 말고 어떻게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통일 수습 정책**

그러면 이렇게 환상적인 경제성장은 통일 전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쓸 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무엇 보다 다음의 네 가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1) 통일 후 10년의 남북소득조정기간에는 남북을 경제분야에 한하여 분리 체계를 갖추고, 북측은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

2)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 Policy)을 채택한다.

3) 통일 후 10년간은 군사비 지출을 GDP 1%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북측 지역의 토지등 부동산 원 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을 해 주고, 국유 형태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를 유지한다.

**부분적 고찰**

위에서 살펴본 거시적 모형에 따르는 분석에 더하여 보다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개별 분야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살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인 분야도 위의 거시 모형 속에 모두 녹아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나타난 대박의 이득 위에 이러한 이득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가) 지하자원

북한 지역에 상당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측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별 쓸모가 없고, 기껏해야 원석 형태로 수출하는 정도이거나 중국인들에게 헐값에 주어버리고 마는 상황이다. 통일 후의 충분한 SOC 아래에서는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하면서 각기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내어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나) 대륙으로의 통로 연결

대륙으로 직접 연결 되는 육상 및 공중 통로는 물류비용 절감과 편의성에 따라 국제경쟁력 상승 효과와 수출 증대를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니, 남한주도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득이라는 점을 통일 전에는 그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활용하고, 통일 이후에는 명확하게 현실로 보여 주면서 선린우호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와 동시에 북측 내부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등 SOC 정비, 확충이 절실하다. 현 상태로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 내부 물류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 천연가스관을 통한 에너지 조달

러시아와 직접 연결 되는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직수입은 에너지의 저렴한 조달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생산활동과 국제 경쟁력이 상승한다.

라) 오염되지 않은 토지 활용

북측의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살려 순환유기농법 체계를 도입하면 고 부가가치를 얻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건강 식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마) 증시의 평가절하로부터 탈피

한국의 정세 불안정에 기인하는 평가절하(Korea Discount)로부터 해방되어 증시가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됨으로, 그에 따르는 부의 증가를 얻게 된다.

바) 이자 부담 경감

리스크 프레미엄 때문에 과도하게 지불하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사) 백지에 이상적인 구도로

무엇보다 북측 지역을 전반적으로 마치 백지 상태로부터 출발하듯, 이상적인 사회 구도를 창설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후발 지역의 이점으로서 전화위복이 되는 현상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몇 가지 두드러지는 이점들을 살펴 보았지만, 통일 이득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현상을 위주로 보아야 한다. 개별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탐닉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도와 그림을 놓치게 되기 쉽다는 점에 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러한 통일 대박은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다.

무력통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니 논외로 한다. 평화 공존하면서 남북 당국간 거리를 좁혀간다고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결국 북측 주민들의 민심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측에서 북측 주민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진정성에 그들이 신뢰를 갖게 될 때 통일은 바로 그들의 손을 따라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 상태로는 남북주민간에 잠재적, 실질적 적대관계가 존재한다.

남측 정부와 민간은 각기 적절한 범위 내에서 북측 민심을 남으로 이끌어 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5.24조치 류에 관한 것이다. 방어위주의 지난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데 따르는 정책이었다. 이것은 상대방 발만 묶는 것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나가야 할 내 발목도 묶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조치들을 그대로 두고는 몇 발짝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에는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엽적인 데 매몰되지 않고 전반적인 구도의 차원에서 행간을 읽고 싶다면, R이론의 요체(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124-126면)를 참조하기 바란다. 현재 북측에 존재하는 실체는 정권과 주민이라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크게 살펴 보면,

첫째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둘째 이에 힘을 받아 통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서 기어코 통일을 만들어 내고,

셋째 그리하여 통일 전후에 가장 긴요한 최선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중심이 되어 복잡한 통일과정 가운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획하고 조정하고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총지휘탑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부 기구들을 필요한 만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해 보지 않던 일까지 맡기는 방법은 좋지 않다. 공직사회에 수십 년 동안 자리잡고 있던 수세적 사고의 타성은 그리 쉽게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구도에서 볼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면을 고려 한다면, 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통준위에서 마련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이 좋다. 통일부에서도 통준위의 새 지침을 따르면서 통일부가 이제까지 관장하던 업무를 계속 담당해 나가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라도 통준위의 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생각해 볼 중요 쟁점들**

남북 문제나 통일 관련 문제들 가운데 얼핏 듣기에는 타당한 말로 들리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들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퍼주기

퍼주기는 안 된다고 한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퍼 준 것도 없다. 그나마 지난 날 남북경협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북측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그 민심을 다시 우리 편으로 이끌어 오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통일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외형상으로 같은 교류협력이라고 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의 그것과 박근혜 정부의 그것이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차원이 다르다. 김 정부에서는 평화공존이 목표이었다면, 박 정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북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면서 통일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 반공

이념 경쟁은 이미 지난 세기에 모두 끝났다.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은 그 이상을 상실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까지 반공만을 외치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결과적으로 북측 집권자에게 집권연장만 시켜주는 꼴이 된다. 우리의 통일은 누가 해 주는가? 반공은 더 이상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통일 자체를 지향하는 자세로 태도를 바꾸어야 할 때이다.

1. 때를 기다려야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지 서두르면 안 된다고 어른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는 언제라도 통일을 경제적으로 감당해 낼 능력이 있고, 오히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덜 들고, 돈이 덜 들게 되어 있다.

1. 통일이 되어도 걱정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어도 걱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박이라는 말로 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대단한 이득을 얻게 되는 전무후무할 기회라는 점을 확인 해 두자.

1. 세금폭탄

통일 되면 통일비용 조달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을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통일 후 10년 기간에 한하여 국민소득 총 1% 선에서 개별적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독일 식 통일연대세(Solidarity Surcharge)형태로 하면 의무적 부담은 모두 끝난다.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는 길을 택하면 된다. 그에 비하여 경제성장은 매년 11%에 이른다.

1. 일자리

남한에서는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 후 북측 지역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밀어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이 태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후 10년간은 북측 경제 독립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또 바이 코리안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실은 그러한 일자리 우려와는 정 반대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로 완전 탈바꿈이 일어난다. 심지어 은퇴자들까지 모두 나서서 일해야 한다.

1. 평화공존

아직도 김대중 정부 시절의 평화공존에 중점을 두는 인사들을 꽤 많이 본다. 그러나 평화공존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공존의 장기간 지속은 영구분단의 모습이 될 뿐이다. 통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평화공존은 좋지만 거기에 올인하고 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1. 흡수통일 반대

흡수통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사실상 급격하게 강제로 흡수통일은 이루어 질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측 주민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로 다 함께 풍요를 누리며 함께 살고 싶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남한은 언제라도 이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 당연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어야 한다. 그러면 흡수통일 말고 다른 가능한 길이 있겠는가? 무조건 흡수통일 반대 라는 자세는 옳지 않다.

1. 급변사태

근래 급변사태가 자주 회자되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북한 내부를 그렇게 허술하게 볼 일이 아니다.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에 2백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가면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은 체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한에 급변사태가 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지금 같이 우리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으면, 급변 사태 발생시 우리가 감당도 못 할뿐더러 결과가 어디로 튈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지도부가 사망하면 북한이 남한의 손으로 들어 오게 되리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우리가 이 글에서 위에 전개한 구도에 따라 사전에 착실히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급변사태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를 능숙하게 처리해 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낭패일 뿐이다.

1. 핵문제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하여 경계는 하되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구소련이 핵무기 수천 기를 가지고도 붕괴되고 만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 상호주의

남북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반대급부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눈앞의 이득 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에의 순기능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변수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국익(National Interest)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인다. 남한 주도 통일이 중국에 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면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여러 쟁점들은 대부분 자칫 패배주의로 연결되어 통일 불가능이라는 관념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 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끝.